

다문화 사회정책의 재정지출 구조와 개선 방안

수행과제명 ...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과제책임자 ... 마 경 희 연구위원

☎ Tel: 02-3156-7267, ✉ e-mail: mkhee@kwidimail.re.kr

요 약

이 연구는 지난 3년(2008-2010)간의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정의하고 정책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함

1. 배경 및 문제점

- 2000년대 초반 성폭력·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지원에서 출발한 다문화사회 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탄력을 받아 급속하게 성장해 왔음. 전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국가간 인적 교류의 증가라는 외적 환경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외국 인력 도입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향후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정책 범위와 예산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사회 정책이 제도적·재정적 측면에서 국가 정책으로서의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 향후 정책 수요도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되지만 그간 추진되어 온 정책의 목표와 향후 방향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문화’를 표방하면서도 결혼이민자 여성과 가족에만 배타적으로 관심과 재정이 편중되고 있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에 노출되어 왔음.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사회’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정책 방향 없이 여러 부처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면서 유사한 사업을 중복수행하는 예산낭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와 적절성
 - 다문화사회 정책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인력유치,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체류·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외국인 인권보호, 국경·국적관리 등 6개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2008-2010년 3년간의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을 분석했음
 - 분석결과 3년간 다문화사회 정책에 투입된 재정지출 규모는 총 2,910 억원이며, 이 중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 예산이 1,247억원으로 43%를 차지함. 다음으로 해외인력유치 사업군 예산은 1,163억원으로 40%를 차지함. 이 외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과 내국인 다문화 이해 증진 사업군 예산 비중이 각각 125억원, 85억원으로 4%, 3%를 차지함

- 이러한 재정지출 구조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과 해외인력유치 사업군의 재정 비중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내국인 다문화 이해 증진 사업군 및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군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정 지출 비중이 낮다고 응답함. 전문가들은 해외인력유치 사업군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군의 재정 지출 비중을 각각 12%p, 10%p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전문가적 판단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기존의 성찰적 논의의 결론을 반영하는 것임. 즉, ‘다문화’라는 용어에 걸맞는 방식으로 다양한 외국인 범주를 포괄하지 못하고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 이 과정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국인의 다문화 이해 증진, 다양한 외국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책적 비중과 관심이 미흡했다는 점이 적정 예산 비중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표출된 것임

○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성과와 문제점

- 해외인력유치 사업군 중 장학생 유치 사업은 높은 재정지출을 통해 유학생의 양적 규모는 증가했지만 선발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성이 불투명함. 기능인력 도입과 활용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에는 일정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산업재해 발생률이 증가하여 근로조건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수혜율과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사업관리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문화이해 증진 사업군의 경우 초·중등교사 다문화 교육 인력 양성, 교육내용 개편 등 다문화 교육 인프라는 확대되었으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사업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국내 체류·정주 외국인 생활편의 제공 사업군은 통역서비스 증가,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국적미취득자인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및 중국동포 등 일시적 체류자들의 생활만족도는 국적취득자에 비해 낮아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사업이 요구됨
- 외국인 인권보호 사업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피해 구제는 긴급지원 및 보호시설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외국인 근로자, 보호외국인, 난민 등 다양한 범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피해 구제는 사업 수단이 소극적일 뿐 아닐 성과목표도 낮게 설정되어 향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난민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난민인정률을 비롯하여 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 국경·국적관리 사업을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율이 감소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3. 정책제언

제안1)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인권보장 사업의 강화

-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고용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집합의식 강화 및 외국인근로자의 보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가 체계 구축되어야 함

제안2) 결혼이주여성의 자립 지원 사업 강화

- 복지적 지원을 넘어서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고학력 결혼이민자의 인적 자본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안3) 내국인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기반 강화 및 내실화

- 교사의 다문화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연수를 16개 시도교육연수원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확대 운영함
- 내국인 다문화 의식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
- 다문화 교육 및 의식개선 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제안4)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강화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소 등 외국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실적에 대한 성과관리를 체계화 함
- 난민인정자에 대한 숙식, 생계비, 직업교육 등 특화 서비스 및 국내 적응 프로그램을 통한 정착 지원을 강화해야 함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관계부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